

# 공생발전·선진건설문화 정착

- 국토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발표 -

##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

### I.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내실화)

-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우수업체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건설 ENG·기능인력, 자재·장비 산업 등 기반분야를 육성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 II.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외연확대)

- 국내시장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건설 5대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수요 발굴 및 부가가치 제고 추진

### III.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동반성장)

-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불합리한 관행·문화의 개선을 통해 건설분야의 동반성장 구조 확립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 강화’를 비전으로 한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2월 20일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건설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①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 ②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③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본지는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과 국내 건설시장이 단순 시공위주의 양적 성장을 지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기관들의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2013~2017)을 수립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이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라고 강조하며, 향후 5년간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실천을 통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 특히 지난 2012년 11월 29일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이 건의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활성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도 보완 △종합평가낙찰방식 도입 등이 포함됐다.

###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체계

비전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	
목표(3)	중점과제(7)	추진방안(20)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건설화	산업구조 내실화를 위한 진출입 체계 강화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부실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강화
	업체 선정 지원 시스템 개선	적정 업체 선정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건설보증 필터링기능 강화 및 보증기관 감독 강화 적정 업체 선정을 지원하는 정보체계 강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반 공고화	‘Smart 건설’ 활성화를 위한 ‘Soft 기술’ 역량 강화 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직업전망 제시 건설장비 안전관리 강화 및 골재 수급기반 안정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해외건설 5대강국 도약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 투자개발형 사업 및 고부가가치 공종 진출 확대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신시장 발굴 등 수요기반 확충	생활형 SOC 확충 및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 신규 건설수요 발굴과 제도적 지원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 R&D 활성화 지원
공생발전 및 선진건설문화 정착	동반성장의 가치실현을 위한 불공정 관행 근절	<b>적정공사비 반영 및 발주자 책임 강화</b>
		<b>공사비의 공정 지급 체계 정립</b>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b>건설공사 참여자간 수평적 파트너링 환경 조성</b>
‘3C’의 실천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녹색건설 환경 구현 안전한 건설현장 작업환경 조성		

### 건설공사 참여자간 수평적 파트너링 환경 조성

-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공사특성, 하자책임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공사 확대 검토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대상사업 지속 발굴
- ‘건설공사 상생협약체’ 제도의 건설현장의 참여자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상생협약체 구성, 운영을 위한 절차, 주요 기능 등 포함)을 마련하여 권장
  - 공공 발주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상생협약체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추진

### 적정공사비 반영 및 발주자 책임 강화

- 건설업자에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 요청 권한부여
  - 민간 발주자가 계약이행보증 요구 시 건설업자도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적정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발주자가 거부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발주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불인정
- 민간공사의 불공정한 도급계약조건 무효화
  - 사회통념상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내용은 해당 조항의 효력을 무효화하여 건설업자의 권익 보호 강화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 조정 활성화를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 상설사무국 설치

- 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 성립시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일방 당사자가 공공기관일 경우 공공기관은 조정결과를 반드시 수용토록 의무화

### 공사비의 공정 지급 체계 정립

- 임금 또는 장비대여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장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추진
  -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보증서 미발급시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보증·직불제도 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

- 행정부담 감소 및 대금지급과정 투명화를 위해 대금결제 방식을 전산화하고 관련기관간 결제정보를 연계하는 방안 검토

\*공사정보를 보유하는 KISCON을 통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

### 적정 업체 선정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발주제도 다양화 및 발주방식·심사기준에 대한 발주자의 자율성 확대
  -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의무화 폐지
  -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맞는 최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고가치를 지향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가격, 공사수행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평가) 도입

-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 최저가낙찰제, 기술제안입찰 등 발주방식을 선택하고, 별도 심사기준 운용 허용
-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사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 조달체계 분권화 병행추진
- 최저가낙찰제도와 적격심사제도의 적정 업체 선별기능 강화 검토
  - 최저가낙찰제도는 전략적 투찰 방지 및 실질적인 저가투찰 선별기능 강화를 위해 저가심 의제도 내실화
  -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 제고
-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현실화 지속 추진
  - 다양한 공사특성,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의 축적·관리 활성화
  - 적격심사의 특성상 낙찰률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실적공사비의 적용비율에 따른 가격 평가기준 조정 등 추진
  - 공사비산정의 근간인 표준품셈은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실사 기반의 정비를 지속 추진하되, 현장실사의 신뢰성 개선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 자금 지원 : 사업 타당성조사·현지교섭 비용 등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개척자금 지원을 확대(연35억원 이상)하고, 지원규모 현실화 검토
- 보증강화 : 건설공제조합 해외 보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보증을 위한 전용재원·기관 설치 등 보증애로 해소방안 검토

- 컨설팅 강화 : 해진협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상담전문가를 확충하고, 사업성평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실제 수주와 연계
- 인력 : 전문인력 양성, 해외건설 인력D/B 구축 등을 통해 인력난 지원
- 동반진출 : 공공기관·대기업 해외건설 진출 시 동반진출 유도

**생활형 SOC 확충 및 민간 건설시장 활성화**

- 생활형 SOC 확충 : 혼잡도가 높은 도시 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낙후지역의 지방도로 포장 등 생활형 지방교통 SOC 확충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예방 시설 확충 등 SOC 건설 추진
- 개발사업 활성화 : 단기적으로 공공기관 보증을 통해 PF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 지분투자 유도, 개발사업 참여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기관 양성 등을 통해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건설보증 필터링 기능 강화 및 보증기관 감독 강화**

- 공제조합의 보증심사를 강화하여 부적격 업체 선별 기능 내실화
  - 과도한 저가낙찰로 공사수행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 거부(또는 담보 징구)를 강화하여 사전에 수주 차단

-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12.7월 제정)을 통해 공제조합의 자본적정성,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강화
  - 매년 경영공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증사고 급증시 경영평가, 긴급조치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
  - 보증기관의 보증약관 제·개정 등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인가 방안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건설보증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이 공제조합에 국한되던 것을 ‘건설관련 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확대

**적정 업체 선정을 지원하는 정보체계 강화**

- KISCON 정확성 제고 : 실적 입력의 편의성·적시성을 높이고, 미입력 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입력률 제고
- 시공능력평가 개선 : 시공능력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발주자가 적정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
  - 경영상태, 기술력, 신인도 등 업체의 평가요소별 능력을 항목별로 공시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직업전망 제시**

- 개인별경력관리 및 기능등급제를 도입·시행하여 직업전망 개선
  - 등급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도록 품셈·노임단가 등에 반영

교육훈련체계를 개편하여, 현장 핵심인력 양성 강화

- 현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규모와 기능내용을 교육훈련에 반영
- 현장인력 훈련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기능등급 상승 유도
- 권역별 거점 훈련기관 설립 지원을 확대하여 각 기관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계

- 적정한 노무비가 지급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 노무비 구분관리 내실화,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을 통해 체불 방지 등 임금보호 강화

- 직업여건 불안정 문제 보완
  - 일감이 부족한 동절기의 건설기능인 직업안정 지원을 위한 수단 마련
  - 인력DB와 KISCON의 건설공사정보를 연계하여 현장인력 일감 찾기 대폭 개선

- 건설산업 인력관리제도 및 기구 마련
  -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 추진을 위한 법안 제정
  - 고용보험 기금 확보 등 핵심기능인력 양성 예산 반영
  - 건설기능인력 양성·관리 총괄기구 설립 추진

